

## 일본 사회복지사업 본질논쟁 연구\*

\*\*  
박 광 준

- I. 서론
- II. 본질논쟁의 시대적 배경
- III. 본질논쟁의 발단과 계보 및 각견해의 논점
- IV. 논쟁의 절정
- V. 본질논쟁의 한계와 의의 및 일본 사회복지학 발전에 영향
- VI. 결론 및 본질논쟁의 시사점

### I. 서 론

이 연구는 일본에서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이후, 그것이 사회과학의 한 학문분야로서 그 뿌리를 내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던 소위 「사회복지사업본질논쟁」의 내용과 쟁점을 고찰하고 그것의 영향과 의의를 살펴보며, 일본에서의 이 논쟁이 한국의 사회복지학계에 던져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쟁은 1952년 1월부터 시작되어 약 1년여에 걸쳐서 사회복지학술지에 매월 발표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7명의 학자가 참가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학의 학문적인 위상을 세우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수개의 학설을 만들어 내어서 학문적인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학문의 발전은 학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학설은 종래의 것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일 경우에 더욱 학문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한 학술지에서 많은 수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상대의 의견을 논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조교수

진 이 「사회복지사업본질논쟁」과 같은 것은 사회복지가 일찍부터 발달한 서구제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논쟁의 과정과 그 결과로써 얻어진 학설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한국사회복지학이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의 진로모색에 큰 시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은 중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국에서 사회복지학이 도입된지 반세기가 흘렀으나 아직 이렇다 할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어 왔다. 이것은 널리 사회복지학계에서 인정받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관된 이론 및 사상체계가 한국에서 두개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이론 체계가 그 학계에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은 곧 논쟁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논쟁이 없으면 학문의 발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의 논쟁이기는 하지만 국내학계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은 이 논쟁의 쟁점들을 명확히 하고 그 영향과 의의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행하여졌다. 논쟁의 발단과 형식,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이 연구의 핵심부분인 논쟁의 주요 쟁점들은 일차적인 문헌, 즉 그 논쟁에 직접 관련된 12편의 논문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쟁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쟁점별로 정리하였다. 이 본질논쟁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행해진 연구<sup>1)</sup> 가 있으나, 그 내용이 일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또한 매우 난해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1차문헌의 분석에 주력하였다. 한편 그 논쟁이 일본의 사회복지학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중진학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 영향의 대강을 파악하였다.

논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논쟁의 쟁점을 몇 항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쟁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그 논쟁의 한계와 의의, 그리고 그것이 일본사회복지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본질논쟁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복지학 및 학계에 주는 시사점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용어를 논쟁에 참가한 논객들이 엄격히 말해서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도 각논객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한국

1) 松田眞一, “社會福祉本質論爭”, 眞田 是 編, 戰後日本社會福祉論爭, 法律文化社, 1984.

에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에 관한 광의의 개념에서 사회보험을 제외한, 즉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이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II. 본질논쟁의 시대적 배경

본질논쟁은 1952년 1월에서 1953년 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1945년 패전을 기점으로 하여, 학자들 간에 약간의 기간차이는 있으나 이후 약 10년 내외의 이 시기는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본 사회복지의 성립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2)</sup>

패전후 일본은 戰勝國, 구체적으로는 연합국총사령부(이하 GHQ)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GHQ의 점령정책은 제2차대전의 성격을 반영하여 파시즘과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하여 「非軍事化, 民主化」가 기본 노선으로 강제되었다. 전통적인 계급구분은 완전히 철폐되었으며,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지지주는 1헥타르를 제외하고는 다른 소작인에 양도되었으며, 미츠비시 등의 독점회사와 재벌은 많은 독립회사와 금융기관으로 분할되었고, 엄격한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정치법의 석방과 노동조합의 결성을 포함하는 노동기본권의 인정 등 민주화정책이 실제로 강력히 시행되게 되었다.<sup>3)</sup> 패전 직후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 더욱이 패전의 충격에서 오는 국민의 정신적 방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러한 강력한 민주화정책의 추진은 일시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체제불안을 야기시켰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戰前의 파시즘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GHQ의 압력에 의한 전후의 민주적 사회개혁은 일본사회를 장차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에로의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GHQ의 점령정책은 사회복지의 기초형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소위 「GHQ 3원칙」으로 알려진 원칙의 제시 등을 통하여 GHQ는 사회복지의 시행과 충실화를 일본사회에 요구하였고, 이러한 원칙의 선에 따라 1946년부터 1949년에 걸쳐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소위 「복지3법」체계가 출범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기초가

2) 일본의 서적에서도 이 시기가 사회복지의 성립기, 혹은 사회복지 이념의 태동기로 불리고 있으며, 신설중은 1945년에서 1954년까지의 이 시기를 성립기로 시대구분하고 있다. (신설중, 일본의 사회보장, 신설중 편,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1994,p.413).

3) R.Rose and R.Shiratori, The Welfare State East and West,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67-68.

다져지게 된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제도들이 점차 완비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의 학문적인 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개념의 혼란이 있었다. 당시에는 사회사업,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어들이 학자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행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의미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용어의 혼돈은 단순한 용어의 범위나 의미에 있어서의 학자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고유의 영역과 특성은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혼돈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의 학문적 위치를 확인하고 이론적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학자들 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출간된 것으로는 1950년에 발간된 竹中勝男의 『社會福祉研究』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뒤이어서 그에 관한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이며, 많은 사회복지연구자가 참여한 본질논쟁이 1952년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당시 사회복지연구자들의 학문적 성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사회복지교육의 역사와 밀접히 관련된다. 첫 번째의 부류는 미국적 사회사업개념을 도입하여 미국의 사회사업이 그 이전의 자선과는 구별되는 과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연구를 진척시키는 경우이다. 일본에서 사회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서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18년이었는데, 이 시기에 미국적 케이스워어크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회사업 자체의 기반이 약했고 군국주의기를 거치는 등의 요인으로 그 영향이 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패전 이후 GHQ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을 도입하는 연구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 논쟁의 주요 논객의 한사람인 당시 關西學院大學의 竹内愛二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른 한 부류는 경제학을 학문적인 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을 통하여 빈곤문제를 규명하려고 하면서 그 빈곤문제의 어떤 특정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의 한 영역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부류이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중의 하나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세기말에 도입된 개념인 사회정책이었고 그것이 경제정책과 어떤 관계인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당시 大阪社會事業短期大學의 孝橋正一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학문적인 배경도 이데올로기도 서로 다른 이러한 연구자가 일본 사회복지학계에 혼재함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이 본질논쟁에서였던 것이다.

### III. 본질논쟁의 발단과 계보 및 각견해의 논점

#### 1. 본질논쟁의 발단과 형식

본질논쟁은 1952년 1월 大阪社會福祉協議會의 月刊 機關誌『大阪社會福祉研究』 창간호가 발간되면서, 「사회복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우선 岡村重夫의『사회복지 사업의 본질에 관해서』라는 논문을싣고, 앞으로 1년동안 동일 주제에 관하여 상반된 의견을 구한다는 편집실의 기획의도에 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 의도적 성격의 논쟁이다. 우선 동지 편집실은 이것을 기획하면서 그 의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4)</sup>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에 관하여』는 앞으로 매월 발행될 본지 1년간에 걸쳐, 매호마다 이 주제에 관하여 폭넓게 유무명의 사회복지사업이론가와 실천가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이 한정된 문제에 관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실제의 사회복지사업을 분석하거나 활발하고 진지한 논쟁을 유도함으로써, 아름다운 베일 하에 다양한 잡물질 속에 묻혀 있던 사회복지 사업 본질의 정체를 명백히 밖으로 드러내게 하고, 편집실에서는 이것을 정리하여 사회복지사업 본질에 관한 문제점을 명백히 해서, 일본의 사회복지사업이론을 발전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의 올바른 모습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편집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취지의 기획 의도대로 사회복지계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논쟁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후 12회에 걸쳐 7명의 전문연구자들이 참가하였는데, 타인의 견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겸한 의견개진도 있었고, 또한 때로는 타인의 견해에 대한 비판없이 자신의 견해만을 피력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 형식과 성격을 볼 때, 이 논쟁은 크게 두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처음의 6회는 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내용의 것이고, 일단 6회에 걸쳐 6인의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입장과 견해가 밝혀진 이후, 나머지 6회의 경우는 타인의 견해에 대한 비판의 경향이 크게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6회와 후6회의 의견개진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본질논쟁은 12회에 걸친, 즉 참가자들의 2회(때로는 1회)에 걸친 논설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비판에 대한 반비판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본질에 관한 논의를 마감하였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 이후 저서 등을 통하여 비판과 반비판등이 이루어졌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논의는 범위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 본질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 大阪社會福祉研究, 創刊號, p.6.

## 2. 논쟁의 계보

논쟁참가자들은 전원 당시 대학교수들이었다.

논쟁에 참가한 학자와 논쟁논문의 제목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6회에 걸쳐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논쟁참가자들의 자신의 견해를 주로 밝히는 내용의 단계를 편의상 제1단계로 하고, 그 이후 6회에 걸쳐 타인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주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진 단계를 제2단계로 나누었다.

### 제1단계 각자의 본질론의 논의

岡村重夫,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에 관하여』, 『大阪社會福祉研究』, 제1권 제1호, 1952.1.

田村米三郎, 『사회복지학 본질론 서설(제1부)』, 제1권 제2호, 1952.2.

竹内愛二, 『사회복지사업과 사회사업』, 제1권 제3호, 1952.3.

孝橋正一, 『사회사업 : 그 본질탐구에의 여로』, 제1권 제4호, 1952.4.

竹中勝男, 『사회복지사업의 본질』, 제1권 제5호, 1952.5.

雀部猛利, 『사회복지학의 구상』, 제1권 제6호, 1952.6.

### 제2단계 타인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논의

田村米三郎, 『사회복지학 본질론 서설(제2부)-사회복지사업의 본질에 관한 제학자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제1권 제7호, 1952.7.

岡村重夫, 『사회복지사업 본질론(보설)』, 제1권 제8호, 1952.8.

竹内愛二, 『사회복지사업의 본질-특히 방법론을 중심으로-』, 제1권 제9.10합병호, 1952.10.

孝橋正一, 『본질탐구에의 제2의 여로』, 제1권 제11호, 1952.11.

小倉襄二, 『사회사업 기초이론의 초점』, 제1권 제12호, 1952.12.

雀部猛利, 『사회학의 응용부분으로서의 (사회)복지사회학』, 제2권 제1호, 1953.1.

## 3. 각견해의 논점

논쟁의 쟁점을 영역별로 검토하기에 앞서, 비록 모든 논자들의 견해에서 그 논점이 명확히 드러 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는 논쟁에서 벗어난 논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논쟁의 쟁점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논쟁에 참가한 학자들의 사회복지사업 본질에 관한 기본

적 입장과 논점의 핵심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sup>5)</sup>

모든 논객들은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의미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논객들은 그것이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대상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일부 논객들은 그것의 성격,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하 각 논객들의 견해의 요약이다.

### 1) 岡村重夫의 견해<sup>6)</sup>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에 대한 접근방법은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sup>7)</sup>이 있으나 내재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1)생계유지관련에 관련된 재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2)사회의 구성원이 생산적이고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1)의 유형은, ①대증요법적(Palliative)방법, ②보호대책적 및 생생대책적(Protective and Rehabilitative)방법, ③예방대책적(Preventive)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대처방법은 시대와 공간에 따르지만, 현대 사회복지사업은 ①에서 ③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역점과 상태가 각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첫째 사회복지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전체의 문제의식이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나고, 둘째, 사회복지사업의 진전을 규정하는 것은 제과학, 즉 의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진보와 보급인데, 그것의 정도가 국가에 따라 다르고, 과학적 인식이 국가에 따라 다르며, 셋째,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2) 田村米三郎의 견해<sup>8)</sup>

5) 원래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는 7명이며 12편의 논문이 제시되었다. 竹中과 小倉은 한 편만을 제시한 반면, 나머지 5명은 자신의 견해에 관한 것과 타인의 견해에 대한 반비판의 두 편의 논문을 제시하였다. 小倉은 후반부에 참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孝橋의 이론에 찬동하면서 논리상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간략히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각 견해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小倉의 견해는 생략하고 6명의 견해만을 요약 소개한다.

6) 岡村重夫, “社會福祉事業の本質について”(1952.1), “社會福祉事業本質論(補説)”(1952.8) 내용의 요약.

7)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쟁의 쟁점을 다루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소개된다.

8) 田村米三郎, “社會福祉學本質論序說”(1952.2), “社會福祉學本質論序說(第2部)”(1952.8) 내용의 요약.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은 구빈 및 방빈(防貧)에 관한 사업이며, 그러한 사업을 가벼운 비용 혹은 무료로 행한다고 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빈곤이라고 하더라도 빈곤과 범죄와의 관계는 범죄학의 문제이며 빈곤이 교육 혹은 생리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것은 각각 교육학, 생리학의 문제이며, 빈곤과 심리와의 관계는 심리학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들과는 달리, 빈곤의 구제 혹은 빈곤의 예방이야말로 사회복지학이 대상으로 해야 할 고유의 영역이다.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의 파생물이지만, 사회복지사업은 자본주의의 파생물이 아니다. 사회정책이 현역 혹은 예비역의 생산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은 생산적 노동관계로부터의 탈락자, 즉 생산무능력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구폐질자, 정신박약자, 노폐자, 연소자, 미망인, 극빈자 등 충분한 노동력이 없는 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혹은 임의적 정책이 사회복지사업이다. 후자의 빈곤은 자본주의사회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사회에 내재된 고유의 문제는 아니다.

### 3) 竹內愛二의 견해<sup>9)</sup>

사회사업은 인간의 사회복지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상호대인관계상의 복지」의 문제를 그 취급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중의 하나의 전문적 분야 혹은 영역이며, 또한 방법이다.

즉, 사회사업은 민간의 사회복지중의 하나의 영역, 즉 「인간상호관계상의 복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문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사업중의 하나의 분야 혹은 영역이며, 여기에서 일반사회사업이 성립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이 사회관계상의 복지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다른 복지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회사업이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 그것은 의료사회사업, 경제적 사회사업, 정신적 사회사업, 혹은 문화적 사회사업 등과 같이 특수사회사업으로서 행해진다.

### 4) 孝橋正一의 견해<sup>10)</sup>

孝橋는, 그 본질이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사회복지사업으로 개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종래 사용되던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사회복지의 의미로 사용한다.

9) 竹内愛二, “社會福祉事業と社會事業”(1952.3), “とくに方法論を中心にして” (1952.10)  
내용의 요약.

10) 孝橋正一, “社會事業:その本質探求への旅路”(1952.4), “探究への第二の旅” (1952.11) 내용의 요약.

「사회사업의 기술론」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산 사회사업의 모습은 과정(process)로서 혹은 수속(procedure)으로서 사회사업을 바라보고, 그 측면을 강조하며 나아가 거기에서 사회사업의 본질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의 문화적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미국과는 다른 문화적 역사적 환경에 있는 일본에서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방법이 곧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사업가의 정신이나 태도가 곧 사회사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써, 그것은 과학적인 탐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자세이다.

사회적 재문제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사회 그 자체의 문제로써 현재의 사회제도의 결함에 기인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 문제로서 「사회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그 문제로부터派生된 관계적 파생적 문제로서 「사회적 문제」, 혹은 「사회복지문제」이다. 전자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정책이며, 후자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곧 사회사업이다. 예를 들면, 실업이라는 문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직접 발생한 문제, 즉 사회문제이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사회정책이며, 가족구조의 파괴와 기능상실 등의 문제는 실업으로 인한 파생적 문제 즉 「사회복지문제」로서 그것이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5) 竹中勝男의 견해<sup>11)</sup>

자본제사회는 그 생산방법의 특질로 인하여 생활의 궁핍화와 사회적 장애를 필연적으로 유발시키고, 따라서 사회는 필연적으로 그에 대처하는 사회적 방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사회사업 내지 사회복지사업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과 사회정책은 모두가 자본주의경제·사회하에 있어서의 사회적 모순이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양자 모두 반사회적인 힘을 방지하며, 인간의 사회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 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이 방지하려고 하는 장애는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경제에서 나오는 것인데 반하여, 사회복지사업에서 다루는 것은 모두 사회적, 비경제적 장애이다. 사회정책의 대상처우는 일반적으로 계급적 대책인 것에 반하여, 사회사업의 그 것은 일방적, 무상적, 인간적 처우이다.

### 6) 雀部猛利의 견해<sup>12)</sup>

11) 竹中勝男, “社會福祉事業の本質”(1952.5) 내용의 요약.

12) 雀部猛利, “社會福祉學の構想”(1952.6), “社會學の應用部門としての(社會)福祉社會學”(1953.1) 내용의 요약.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예속적인 지위에 놓여져 있는 계급이, 그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위협받을 때 그들이 스스로의 복지생활에 관한 수익권이나 저항권을 발휘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즉, 복지를 침해받고 있는 사회적 계급적 자각 위에서 응집된 노동대중의 압력이 덮받침될 때, 비로소 소극적으로 노동계급궁핍화의 완화책으로서 사회복지가 수립되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의 연구내용은 일단 사회적 제문제의 분석에서 출발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계급적 동향이나 의식, 그리고 그것을 지양 혹은 보충하려고 하는 계급적 세력과, 그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지방책의 성격과 한계 등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의 중핵적 영역이다.

#### IV. 논쟁의 쟁점

##### 1. 사회복지사업본질에의 접근방법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의 대립이 논쟁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고, 이것은 논쟁의 첫발단이기도 하였다. 즉, 첫 번째 논객이었던 岡村重夫는 우선 논문의 첫머리에서 문제접근의 방법을 내재적 방법과 외재적 방법으로 나누고, 외재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신은 내재적 방법에 의해 본질론에 접근하고자 함을 명백히 밝혔다. 이는 당시까지의 일반적인 방법이 외재적이었던 풍토에 대한 반발로 생각된다.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는 岡村重夫의 외재적 접근에 대한 비판논지는 다음과 같다. 외재적 입장이란 사회복지사업과 그 이외의 제도들, 예를 들어 사회정책, 교육 등과의 상이점을 밝힘으로써 타제도와는 다른 사회복지사업의 독자성과 본질을 밝히려고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즉, 사회복지사업은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의 본질도 오늘날의 인류사회가 도달한 역사의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업의 보편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일 뿐, 결코 영구 불변적 본질적 개념은 아니다. 그런데 외재적 방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공통적인 모습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급속한 사회변동에 부응하여 사회복지도 항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세계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구성하기 어렵다. 외재적 방법이란 쉽게 말하자면,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은

교육사업, 문화사업, 보건사업, 사회정책 등등의 것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들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 바로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이라는 입장에서 그 본질을 규명하려는 입장인 것이다.

이어서 岡村重夫는 외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재적 접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관념화되어 있는 사회제도를 분석해서, 이것을 그 중요한 특질, 예를 들어 목적, 대상, 방법 등에 기초하여 유형화함으로써 현대 사회복지사업의 역사적 특질과 발전방향을 명백히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본적 시각을 사회복지사업의 내부에 두고 그 변화발전의 모습을 찾아내어 그것을 유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밝히려는 방법으로, 이것이 내재적 방법이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다른 영역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소위 외재적 방법론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그 비판은 우선 岡村重夫가 규정한 내재적 방법, 외재적 방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모호하며 그 구분의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보다 중요한 비판점은 과연 그가 말하는 내재적 접근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본질규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었다. 즉, 岡村重夫에 의하면, 내재적 접근은 「각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관념화되어 있는 사회제도를 분석해서, 이것을 목적, 대상, 방법 등에 기초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밝히려는 방법」이었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과연 사회복지사업의 「고유의」 본질이 규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입장에 대한 한계와 비판을 가장 명확하게 제기한 사람은 田村米三郎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4)</sup> 「岡村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유형화하여 남성과 여성, 혹은 성년자와 유소년자 등의 방식으로 분류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규명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종류를 대학, 고교, 중학교, 국민학교로, 또는 고등교육기관 및 보통교육기관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학교의 본질을 명확히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의 인간다운 본질, 혹은 학교로서의 본질을 밝히려는 것은, 그 이외의 것과의 본질적 차이 혹은 독자성을 명백히 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밀줄:필자)으로, 岡村이 말하는 외재적 방법만이 진정으로 본질규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13) 岡村重夫, 전개논문(1), p.7.

14) 田村米三郎, “社會福祉學本質論序說(第2部)”, pp.4-7.

아울러 그는 岡村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竹内가 「사회복지의 이념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나이드를 자각하는 것인데, 이 나이드가 사회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사회복지 운동으로 되고, 그것이 입법이나 정책으로서 결실된 경우에 사회복지정책으로 불리며, 이 정책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된 경우에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한 것에 대하여, 그 정의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내용이 극히 광범하고 모호하여, 교육사업, 위생사업, 문화사업 등 모든 것이 사회복지사업 속에 포함되어 버리므로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업과의 차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편 孝橋正一은 내재적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sup>15)</sup> 즉, 사물의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의 본질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그와 같은 과정을 성립시키고 있는 사회적 근거를 추구하는 것에 의하여 규명될 수 있는 것이다. 岡村과 竹内는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종래의 사회사업과의 구별을 통하여 행하려고 하지만, 두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사업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존재의 제도적 측면이고 사회사업은 동일한 존재의 과정적 측면일 뿐이므로, 결국 이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사업이라는 사회적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두사람의 접근이 본질탐구를 위한 노력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사업의 본질을 역사적 사회구조나 역사적 성격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 그 본질규명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岡村과 竹内는 이후의 논문에서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지는 않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보충설명을 주로 행하고 있다. 竹内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의 사회적 나이드를 충족시킴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사회적인 이념과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사업이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에 그침으로써, 비판자들이 앞서 제기한 의문, 즉 「그렇다면 그것과 교육사업이나 위생사업, 문화사업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sup>16)</sup>

한편, 岡村은 그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비판을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가 가진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회복지사업이 사회정책과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는 좁은 범위의 것이 아님을 우선 주장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사회정책과 구분할 때, 그 조건이 되는 것은 그것을 구분하는 연구자가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사업 양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정책에 기준을 둔 연구자들이 과연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불리는 그 개념과 현실사업, 그리고 국제적인 개념 등에 대해

15) 孝橋正一, “探究への第二の旅”, pp.9-11.

16) 竹内愛二, “とくに方法論を中心にして”, 1952, 참고.

서 어느 정도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가 적고 그것과 구별되는 다른 제도(예컨대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만 있는 사람이 그것과 사회복지사업을 구분함으로써 그 본질을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회복지사업의 본질규명 이전에 그것의 현재 모습, 즉 실존에 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개념들을 분석 분류해서, 사회복지사업과 그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본질규명에 필요한 작업이요 방법이라는 것이다.<sup>17)</sup>

요컨대, 내재적 입장의 논객들은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공공구제사업이나 자선사업과 구별되는 어떤 성격을 발견해 내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던 반면, 외재적 입장은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이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정책이나 교육제도, 보건제도 등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발견해 냈으므로써 그 본질을 규명하려는 시도였다. 이것은 결국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설정에 관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이 과연 빈곤만에 관련된 것인가, 라는 쟁점으로 연결된다.

## 2. 사회정책과의 관계에 관한 쟁점

여타의 제도와 사회복지사업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입장이 곧 외재적 입장이라는 것은 앞절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과 비교하여 차별화 함으로써 그 본질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제도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논쟁의 경우 그것은 사회정책이었다. 즉, 외재적 입장의 논객들은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정책과 구별되는 그 어떤 특성(밀줄:필자)에 그 본질이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정책과의 구별과 그것과의 관계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일본에 있어서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은 노동정책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19세기 말부터 사용되어 오던 용어였다.<sup>18)</sup> 그런데 이 사회정책이 빈곤과 노동에 깊이 관련된 용어였으

17) 岡村重夫, “社會福祉事業本質論(補說)”, 1952, pp.3-4.

18) 일본의 경우 「Sozialpolitik」라는 독일어를 사회정책으로 번역하여 최초로 사용한 것은 독일유학후 일본 최초의 사회정책강좌를 개설한 동경대교수 金井延이었는데, 그를 중심으로 하여 1897년에 일본 사회정책학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사회정책의 내용 등에 있어서는 독일의 영향이 매우 강하여 사회정책은 곧 노동정책이라는 독일보다는 다소 좁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사회정책의 개념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이러한 개념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식의 전통적인 개념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사회과학사전은 사회정

므로, 역시 그것들에 깊이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사회정책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었고, 또한 그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이 논쟁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사회정책과의 관계에서 규명하려는 논의는 孝橋正一에 의하여 제기되었는데, 소위 孝橋이론으로 알려진 그 논의는 양자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대표적인 견해가 되어 있다.

孝橋正一是 흔히 사회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를 社會的諸問題라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그것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는 이 사회적제문제의 구조적 분석이야말로 사회사업본질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제 문제중 하나는, 사회문제<sup>19)</sup>라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대표적으로는 노동문제, 빈곤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 사회문제에 의하여 파생된 제2차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사회적 문제, 혹은 사회복지문제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이나 고용부족으로 인한 실업 등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필연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문제이며, 이 사회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범죄나 질병 등 사회병리적 현상과 나아가 생활의 각분야에 걸쳐 사회적 필요의 불충족과 불완전 충족 등의 문제가 그 정도와 모습에서 다양성을 보이며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 혹은 사회복지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孝橋正一是 전자 즉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정책이며, 후자 즉 사회복지 문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사업은 사회정책을 보충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하여 사회사업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즉, 그의 용어로 말하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보충하는 것이며, 사회정책에 대한 보충성이라는 측면에 사회사업의 독자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만약 사회정책이 완벽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면, 사회사업의 입지는 없어지는 것이지만, 자본주의하의 사회보험에서는 일정한 경제적 한계가 있고 또

---

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정책이란 국가가 사회문제의 핵심으로서의 노동운동과 그 요구를 스스로의 체제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체계이며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과 기타 제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입법이나 시설의 총칭이다.」(박광준, 사회정책의 이념, 현상, 새로운 전략, 사회복지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문, 1995. 2.)

19) 孝橋正一是 이 문제는 사회 그 자체의 문제라는 의미에서 사회문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란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자에 관한 모든 문제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제도의 기본적 결함이라는 의미이다.

한 사회보험의 대상이나 급여의 내용에 각기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사람이나 급여의 부족이 생기게 된다. 이들 보험의 안전망에서 포착되지 않은 자, 기타 사회적 수단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사회정책에 대해서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사회사업의 특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회사업은 사회정책을 보충하여야 하는 것이지 代替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실업보험제도라고 하는 사회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업으로 인한 다양한 파생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회사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공설시장, 재활작업장, 간이식당 등이 사회사업적 대응이다. 그런데 공설시장이나 작업장 등(즉, 사회사업)은 실업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업문제에 대해서 실업보험(사회정책)으로 대처하지 않고, 공설시장 등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사업이 사회정책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대체하여 역할을 행하려는 것으로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이 발전한다면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잘못된 환상이라는 것이 그의 논리이며, 그는 사회사업을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sup>20)</sup>

「사회사업이란 자본주의제도에 있어서의 합목적적이고 보충적인 사회적 방책시설체계로서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 공적 및 사적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사회사업의 목적은 어떤 특정의 사회층(국민대중)에서의 사회적 필요의 불충족 및 불완전 충족에 대응하여 사회생활상의 복지의 증진과 제공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사회의 복지수준의 고양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竹中勝男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장애를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으로 나누고 경제적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정책이며, 사회적인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여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양자는 모두가 자본주의경제·사회하에 있어서의 사회적 모순이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양자 모두 반사회적인 힘을 방지하며, 인간의 사회적 생활을 보전 신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이 방지하려고 하는 장애는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경제에서 나오는 반면, 사회복지사업에서 다루는 것은 모두 사회적, 비경제적 장애이다. 사회정책의 대상처우는 계급적 대책인 것에 대하여, 사회사업의 그것은 일방적, 무상적, 인간적 처우이다.」<sup>21)</sup> 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孝橋正一과 竹中勝男의 분석과 논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그것의 논리를 부

20) 孝橋正一, “探究への第二の旅”, p.9.

21) 竹中勝男, “社會福祉事業の本質”, pp.10-11.

정하는 논자는 없었으며, 특히 孝橋正一의 분석은 독창적이면서도 매우 정확하고 치밀한 논리라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그것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田村米三郎은 사회적 제문제를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문제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사회정책과 사회사업이라는 孝橋正一의 논리를 부정하고,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사업의 구분은 그것이 대처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의 성격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밑줄:필자)고 주장하면서, 노동능력자인 임금노동자의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정책이고 생활무능력자의 곤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정의하여 孝橋正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sup>22)</sup> 그런데 이 양자의 견해 차이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인 소산인가 아닌가 하는 두개의 상이한 견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사회복지사업은 자본주의 고유의 산물인가에 관한 쟁점

田村米三郎이 사회적 제문제를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문제로 이원화하여 분석한 孝橋正一의 이론구조에 반박하고, 필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대상자에 의한 구분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은 자본주의경제질서 외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논지는 사회정책에 관한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大河内一男의 논지를 계승하고 있었다.<sup>23)</sup>

논쟁에 참가한 학자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竹内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제가 자본주의경제가 근본적으로 파생시킨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竹中勝男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이 사회복지사업은 모두가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원리가 국민생활에 가져온 사회적 생활적 장애 및 곤란의 경감완화책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본제 생산방법의 역사적 특질은 그 자본축적과정이 산업예비군의 크기에 비례하여, 현역노동자의 노동력을 그 가치이하로 평가(저임금의 확립)하거나, 회귀적인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력을 주기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흡수 이탈시키기 때문에 산업예비군이 항상화하게 되고, 생활

22) 田村米三郎, “社會福祉學本質論序說(第2部)”, pp.9-10.

23)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력설」이라고 불리는 大河内의 사회정책관은 이미 戰前부터 논의되었는데, 이후의 많은 학자들이 그의 견해를 기준으로 삼아, 찬성과 비판의 견해를 밝혀 왔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의 사회복지사업의 위상을 알아보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자세한 것은 大河内一男, 社會政策(各論)(1950), 社會政策(總論)(1948), 邊時敏, 社會政策論, 참조.)

의 궁핍화와 이것에 수반된 사회적 장애나 부조정이 현저히 나타나기에 이른다. …… 이 생활의 장의 불안정은 사람들의 심신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그 자녀를 방임 혹은 취로사키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그 때문에 가족결합이 이완 봉괴되어 그 자녀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 개인적 집단적 부조정이나 봉괴현상이 현저하게 된다. 이것이 자본제 생산에 부수하는 필연적인 현상이므로 자본제사회는 필연적으로 그 현상에 대처하는 사회적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경제자체 그리고 사회자체의 재생산과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은 그것의 독자적인 목적과 대상영역 및 조직, 방법, 시설을 가지는 것인데,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사회조직상에서 본다면, 그 내부에 위치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초월한 외부의 사회적 이념과 윤리적 요청으로써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sup>24)</sup>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문제가 자본주의의 사회문제라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동의하였지만, 孝橋는 그것이 단순히 자본주의하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사회 고유의 문제(밀줄:필자)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사회 이외의 사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라고 단언하였고, 田村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문제가 자본주의사회의 산물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자본주의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田村은 그 문제의 근원은 자본주의사회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재산제도에 관련된 문제(밀줄:필자)이며, 따라서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예컨대 봉건사회에서도 존재하던 문제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용관계하에 있는 노동능력자인 임금노동자가 자본제 생산의 내재적 법칙에 근거하여 궁핍화하는 것이 자본제 사회의 내재적 필연이라는 것은 孝橋와 동감이며 또한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신체장애로 인하여 궁핍하고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궁핍하며, 노령이 되거나, 부양자 없는 아동이 곤궁한 것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필연성이라고 볼 수 없다. 자본제 생산방법이 필연적으로 부인을 미망인으로 만들고 성년자를 노약자로 만들고, 아동의 부양자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孝橋의 생각은 「자유롭고 독립된 인간이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 때문에」 궁핍에 빠지는 것이고,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자본제사회의 특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임금노동자가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자본주의의 특질임에는 틀림없으나,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더라도 사유재산제도하에서는 노동 무능력자(노령자나 아동, 유아를 가진 미망인 등)는 곤궁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임금노동자가 아닌 영세상공자 영자에 관해서도 이 점은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의 생활 곤궁자, 요원호자 가운데는

24) 竹中勝男, “社會福祉事業の本質”, 1952, pp.7-8.

임금노동관계(자본제 생산관계)에 있지 않는, 즉 생산수단의 소유자(자영자)의 가족이 있고, 그 세대주의 사망 혹은 사업의 실패로부터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설명은 단지 자본주의 사회에 관해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sup>25)</sup>

그리고 나아가 「자본제사회의 구조적 필연으로부터 발생하는 빈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특별히 두 가지로(사회문제와 사회복지문제로) 나눌 필요가 없다. 동일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동일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곤궁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만 제거(혹은 완화)한다면, 그 결과는 함께 없어지는 법이다. 이 본질적인 궁핍을 무리하게 두개로 구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26)</sup>라고 孝橋를 비판하였다. 즉, 그의 입장은 노동능력자인 임금노동자의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정책이고, 노동무능력자의 곤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이며, 따라서 전자는 자본제 사회의 내재적 필연적 산물이지만, 후자는 사유재산제도의 필연일 뿐 반드시 자본주의 사회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孝橋는 첫째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문제가 모두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田村의 주장에 대해, 「얼굴에 난 종기와 여드름은 모두 인간의 얼굴에 난 것이므로 그 치료에 관해서 구별의 필요가 없다.」<sup>27)</sup>는 식의 주장과 같다고 재비판하고, 「자본주의하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이 생산수단과 결리되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사회적 규모에서 근대적 궁핍이 발생하는 것이며, 노예제나 농노제하의 노예나 농노는 노예제와 농노제라고 하는 그 사회제도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양자의 경우 모두 실제의 생산자가 생산수단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며, 자연적 재해나 우연적 사고만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고, 그 사회의 문제는 부분적이며 우연적이었을 뿐, 전체사회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전시대적 빈곤과 근대사회적 빈곤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빈곤현상 일반으로서 같이 취급하는 것은 田村의 이론구성의 치명적인 결함이다.」<sup>28)</sup>라고 반론하였다. 또한 田村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을 경제질서외적 존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현대의 구빈입법(예를 들어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자, 때로는 취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저임금의 경우는 소득을 보조해 주는 일 등의 사회복지사업활동을 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田村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25) 田村米三郎, “社會福祉學本質論序說(第2部)”, 1952, pp.8-9.

26) 上掲論文, pp.9-10.

27) 孝橋正一, “探究への第二の旅”, 1952, p.11.

28) 上掲論文, pp.11-12.

이 부분에 관한 논쟁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었으나,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을 끄는 것은, 그것이 자본주의 고유의 산물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에 관한 孝橋와 田村의 견해차이는 그 초점이 자본주의 이전에도 사회복지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존재했는가 아닌가(밑줄:필자)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 있었을 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즉 사회주의사회에도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양자의 그 이론구성상으로 보면, 사유재산제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자본주의사회도 아닌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복지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유형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에 양자가 같이 도달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후일의 논쟁거리로 남게 되었다.

#### 4. 사회복지사업은 반드시 빈곤과 관련된 것인가에 관한 쟁점.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역사적 사회구조적 분석에서 찾으려고 하는 논객들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서의 빈곤문제와 밀접히 관련지어서 그 본질을 모색하고 있다. 孝橋正一은 필두로 하여 小倉襄二, 鶴部猛利 등이 그러하며, 이들은 소위 궁핍화법칙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기본입장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 자본주의사회 고유의 산물은 아니라고 주장한 田村米三郎과,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이 사회적 장애를 가진 개인에 관하여 그 장애를 경감하거나 해결하는 전문적 기술이나 사회적 사업이라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 竹中勝男 등도 역시 빈곤과 밀접히 관련지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그 문제 혹은 대상자가 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과 구체적인 서비스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岡村重夫, 竹内愛二 등은 그것이 반드시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엄격히 말하면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이 비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의미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빈곤층만이 아니라는 의미는 다소 다르지만, 그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논리를 전개한 것은 아니었다.

岡村重夫는 孝橋가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복지사업의 전부는 아니라고 반박한다.<sup>29)</sup> 즉,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보다 폭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는 일반시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니이드가 빈곤이나 노동, 미신이나 이용불편으로 인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충족되지 않는 사태라고 규정하고, 그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29) 岡村重夫, “社會福祉事業本質論(補說)”, 1952, p.3.

이라고 한다면, 孝橋, 岡村, 竹中の 논의에 한정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한계는, 이 논쟁이 소위 정책론과 기술론 간에 서로 심한 배타성을 가진 논쟁이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사회복지학이 발전하는 초기에 있었던 이 논쟁이 곧 기술론과 정책론의 대립이라고 이해되는 것<sup>32)</sup>은 그 배타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이 논쟁을 통하여 정책론과 기술론을 하나의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결실을 가져 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 논쟁으로서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sup>33)</sup>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일본의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 영향 또한 커졌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 논쟁이 일본의 사회복지학 성립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복지의 고유의 연구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는 것에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의 학문영역이 독립학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유의 대상규정임은 명백한 일이다. 이 본질논쟁은 그 첫 번째의 쟁점이 바로 그 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정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이미 언급한대로, 소위 내재적 방법론자들은 역사와 현실 속에서 공공구제나 자선 등 전근대적인 사업과 구별함으로서 현대적 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하였고, 외재적 방법론자들은 사회정책이나 기타 사회제도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대상영역이나 성격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사회복지사업의 독자적인 대상규정을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사회복지학을 하나의 독립학문으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역시 전후 GHQ에 의한 사회복지의 확장과 이후 그 영향으로 인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용어의 일반화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많은 논객들이 당시 막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규정을 인용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은 변하지 않거나 새로운

31) 松井二郎는 일본의 사회복지이론을 사회민주주의 입장으로서의 竹中이론, 막스주의 입장으로서의 孝橋이론, 기능주의 입장으로서의 岡村이론, 그리고 통합론의 입장으로서의 嶋田이론의 4가지를 꼽고 있는데,(松井二郎, *社會福祉理論再検討*, 1992) 이 중 3개의 이론가가 이 논쟁에 참가한 셈이다. 그런데 이 논쟁이 정책론과 기술론의 상극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 정책론의 孝橋와 기술론의 竹内의 논의가 중요하겠으나, 古川의 주장과 같이 이론적인 계보에 있어서나 그 인맥으로 보니 岡村의 이론이 기술론을 흡수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가장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孝橋와 岡村의 논의라고 생각된다.

32) 古川孝順, *社會福祉學序說*, 有斐閣, 1994, p.31.

33) 松田眞一, 전계서, p.3.

개념들에 대한 혼란, 또한 동법의 규정이 그대로 사회복지의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사회복지가 빈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학문으로서 확립되어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빈곤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회정책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이나 독자적인 연구대상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었으며 이 논쟁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학문적 노력이었다.

이 논쟁은 논쟁이 끝난 후 특별한 가지적인 학문적인 성과를 가져 온 것은 아니었으나,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복지학의 이론 발전, 특히 일본 독자적인 이론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소위 외재적 입장을 취하는 논객들의 공통된 기본입장은 사회복지의 개념이나 발달, 구성 등에 대해서 미국의 사회복지연구자들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도입 혹은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sup>34)</sup> 그들은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개념은 물론, 발달과정에 관해서 서구의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눈으로 분석하면서, 일본 특유의 발달과정과 현실에 대한 분석을 접목시킴으로서 독자적인 개념과 이론의 구축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가 먼저 발달한 국가의 대표적인 견해나 이론을 도입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일관된 관점과 논리를 가지고 사회복지의 이론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참가한 논객들에게만 한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항상 타연구자들의 비판의 여지를 열어 두고 그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계울리 하지 않음으로서 사회복지이론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측면 역시 적지 않았다.<sup>35)</sup> 이것이 일본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진 첫 논쟁은 아니었으나 사회복지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첫논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 논쟁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모태로 하여 이론적 계보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복지운동론 내지 신정책론, 사회복지경영론 등의 이론적 성과는 바로 이 본질논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sup>35)</sup>

34) 이 논쟁의 영향을 개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쟁이 일본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키쳤다는 것은 일본의 사회복지학계에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견해이지만, 그 논쟁이 단기간 이루어진 후에 종결되었고, 그 직후에는 가시적인 어떤 결실을 가져 오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 평가가 어렵고, 그에 대한 전문연구도 매우 드물고 더구나 40여년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애매하며 주관적이기 쉽다. 즉,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으나 그 영향은 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그것은 이 연구과정에서 행한 중진학자들에 대한 면담과정에서도 그대로 였다. 필자는 이 논쟁참가자 중 関村씨와는 견해를 나눌 수 있었고, 孝橋씨로부터는 박사과정에서 2년간 직접 지도를 받았는데, 그 논쟁의 영향에 대해서는 당사자 역시 이상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편, 이 논쟁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론과 기술론 그 양자간의 입장에서 서로 상대의 입장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이론구성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하였고<sup>35)</sup>, 그 결과 각기 상대의 입장을 포용하는 형태의 이론구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 두 영역을 사회복지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체계로 수렴하지 못하고, 기술론인가 정책론인가, 처우인가 제도인가라는 양자택일적인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일조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양입장의 학문적 통합은 실패했으나 이 논쟁을 통하여 기술론과 정책론은 각기 그 입장을 확인하고 이론적인 정교화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 논쟁의 중요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개의 입장을 학문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은 바로 이 논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木田徹郎이 저서『社會福祉事業』에서, 정책론과 기술론의 양자를 제도체계와 전문행동체계로 재구성하고 이 양자를 통합하는 것으로서의 사회복지체계를 시도하였던<sup>36)</sup> 것은 1967년의 일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확장이 이루어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책론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는 가운데, 정책론을 모태로 하여 사회복지운동론 내지 신정책론<sup>37)</sup>이 대두되었고, 岡村重一의 독자적인 이론은 기술론을 흡수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있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발전의 원천을 제공한 것이 곧 사회복지본질논쟁이었던 것이다.

이 사회복지사업본질논쟁이 일본의 사회복지학 발달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흡사 사회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짐멜의 형식사회학(formal sociology)이 행했던 역할 및 지위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짐멜이 그 이전의 종합사회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사회학의 고유의 대상과 영역을 규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사회학에 대한 의문 역시 일본 사회복지본질논쟁에 대한 의문과 일맥상통한다. 즉, 짐멜이 사회의 실체를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고 사회의 형식을 사회학의 고유의 영역으로 삼으려고 시도함으로써 사회학의 고유대상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는 공헌을 하였으나, 과연 사회를 형식과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가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복지사업 본질논쟁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논객들이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대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각기 경제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비경제적 장애, 사회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에서 유래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파생적 문제

35) 古川孝順, 전개서, pp.28-48의 내용을 참고할 것.

36) 이 논쟁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기술론의 입장에 선 논객들 보다는 정책론의 입장에 선 논객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7) 古川孝順, 전개서, pp.31-32.

38) 真田是(社會保障, 1966), 一番ヶ瀬康子(社會福祉事業概論, 1964), 高島進 등에 의해 1960년대 중반기 이후부터 제기되었다.

로서의 사회복지문제, 노동능력자의 빈곤에 대한 노동무능력자의 빈곤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그 고유대상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과연 그러한 문제들이 현실사회에서 그렇게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 VI. 결론 및 본질논쟁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본질논쟁의 쟁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그것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 네 가지 쟁점이란 ①사회복지사업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내재적 방법과 외재적 방법의 대립, ②사회복지사업과 사회정책과의 관계에 관한 쟁점, ③사회복지 사업은 반드시 자본주의 고유의 산물인가에 관한 쟁점, 그리고 ④사회복지사업은 반드시 빈곤과 관련된 것인가에 관한 쟁점, 이다. 이렇게 쟁점별로 그 내용을 고찰한 결과, 이 논쟁에 참가한 논객들 전원이 이론이라고 할 만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학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견해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사회복지학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사회복지의 고유의 연구영역을 확보함으로서 다른 사회제도나 다른 학문과는 다른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데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논쟁이 직접 이루어졌던 일본에서는 현재 사회복지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현실문제에 대한 실체적 대응책으로서의 사회복지를 보는 시각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여서,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학자들 간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일고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논쟁은 생활보호제도와 서비스논쟁, 사회정책논쟁, 신정책론 논쟁, 의료사회사업논쟁 등 수개에 이르고 있으나 거의 1960년대 이전에 이루어 진 것들이므로, 그 이후의 학문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도로 말미암아 많은 연구자들의 에너지가 국가시험을 위한 교재개발에 투입됨으로써 학문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연구와 논쟁의 중요성이 일본사회에서도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논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첫째, 이 논쟁의 긍정적 교훈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토착화노력과 학문적 대화로서의 논쟁의 중요성, 둘째, 이 논쟁의 부정적 교훈으로서의 사회복지학 발전을 위한 임상론과 정책론의 통합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두개의 부분에서 중요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최초로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된 것이 1947년의 일이므로 대학에

서 사회복지교육이 시작된지 반세기를 맞게 된 셈이다. 그동안 사회복지라는 실천과 학문 양분야에서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져서, 1995년에는 46개 대학에서 사회복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의 관심영역도 확대되고, 학문적 성격도 변화되어 왔다. 그동안 서구의 많은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의 이론들이 도입 혹은 소개되었으나, 한국사회복지 학계가 사회복지학을 하나의 독립학문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성에서 최근 늦게나마 바람직한 새로운 학문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에 도입된 사회사업이론들의 검토나 사회복지개론서의 분석, 한국 사회복지학의 연구대상설정의 시도, 그리고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의 모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9)</sup>. 또한 1995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기획주제가 「한국사회복지학을 진단한다」였다는 것은 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이 학문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광범한 연구영역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인접학문과의 중복된 연구영역을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그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통솔력을 가지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상을 초래하게 된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자리잡고 있겠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외국의 사회복지이론이나 역사,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한국사회에의 적용가능성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못했고, 그러한 경향의 학문적 업적을 검증할 수 있는 비판과 토론의 장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회복지개론서에서 보여지는 개념정의의 불일치 등의 심각한 문제는<sup>40)</sup> 학문적인 검증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지식전달에 대해서 학계가 비판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각연구자들 차원에서는 자신의 연구를 일관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타인의 비판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정교한 이론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게으르게 하는 결과를, 그리고 학계차원에서는 독립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미미함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회복지사업 본질논쟁은 그것이 사회복지가 도입되고 확립되는 시기에 있어서 일본사회복지학의 이론구성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 논쟁에 참가한 논객들 모두가 사회복지에 관하여 「이론」이라고 불리울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회복지라는 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다르며, 그 대상은 무엇이고, 그 대상은 왜 확대되어 왔으며,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해야 하는가

39) 예를 들어, 김상균, "한국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복지학", 1994년 사회과학 심포지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5, 최원규, "사회복지교육반세기의 회고",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1995.4, 이혜경,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1995.4, 등이 있다.

40) 최원규, 전개논문, pp.25-38.

등에 관한 일관된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소수의 논객들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에게는 타인의 소박하고 단편적인 지적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자신의 이론체계를 더욱 정교화하는 노력을, 그리고 학계에는 타인의 이론을 검증하는 학문적인 발전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회복지학의 다양한 학문적 입장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후 일본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발전은 이 논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이 본질논쟁은 정책론과 기술론이라고 하는 두개의 기본적인 학문적 입장이 서로 배타적으로 대립한 결과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는 학문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이 없었음으로 인하여, 학문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논쟁의 의의를 저하시켰고 양자를 통합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지연시켰다는 점이 그 한계의 하나였다. 이러한 부정적 교훈을 통하여 유사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복지학이 얻을 수 있는 사사는, 양입장을 통합하려는 학문적 노력 없이 각각의 입장만의 정교화에 주력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학문적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과제가 「임상과 정책이라는 두 영역을 각각 보다 세련화시키는 작업과 그 두 영역을 연결시켜주면서 하나의 학문체계로 통합하는 개념틀의 개발」<sup>41)</sup>이라는 이해경 교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한국 사회복지학이 현실적으로 임상과 정책으로 쉽게 분류되고 있고, 이 두 영역을 하나의 학문체계로 통합하려는 노력과 대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전문영역별 대화의 장이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문영역별 대화의 장이 활발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만약 그것이 두개의 입장을 학문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복지학의 학문발전을 더디게 할지 모른다는 점은, 일본의 본질논쟁이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학계에 있어서 임상론과 정책론은 서로 수용하면서도 대립하고 있는데, 그 대립하는 에너지를 한국 사회복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곧 논쟁과 대화의 장이다. 그러한 논쟁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이 대립하는 힘들간에 즉, 각기 다른 시각과 주안점을 가진 연구자들 간에 학문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그 본질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확보와 나아가 한국 사회복지학의 변증법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논쟁의 장에는 대립하는 생각과 힘이 있고, 그 대립하는 생각이나 에너지는 학문의 변증법적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된다. 변증법(dialectic)적 발전은, 같은 어원을 가진 날말인

41) 이해경, 전계논문, p.71.

대화(dialogue)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대화란 한 사물에 관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를 서로 주고받게 하고, 그 회수가 거듭될수록 그 본질에 보다 가깝게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효능을 가진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학문적인 대화의 장이 부족한 한국 사회복지학계에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